

EU와 중국 - 상호 의존 시대에서 이해와 가치의 조정

우베 비센바흐*,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

이 글은 중-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EU의 규범적 외교정책과 중국의 주권 기반 현실주의 아젠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조명하고 있다.

- 1) EU와 중국의 관계가 EU의 윤리적, 규범적 외교정책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가치 기반의 외교정책이 권력 정치와 어떻게 타협할 수 있나? EU에서 공언하는 가치와 규범은 얼마나 보편적인가?
- 2) 중국이 주권,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접근법을 UN과 개발도상국가를 상대로 다르게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3) 중국이 타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국제적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탈 서구화라는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 중국이 국제 정책을 수립하는 배경은 유교적 가치와 서구식 민주주의의 대립이다. 하지만 이 글은 유교적 가치가 곧 권위주의라는 공식을 거부하며 한국을 그에 대응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이어서 EU의 규범 의제와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도 논한다. 두 번째 부분의 초점은 인권 정책으로, EU의 이해와 인권을 증진하려는 EU의 노력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EU와 중국의 분명한 경쟁 구도를 통찰하고 있다.

중-EU 동반자 관계의 비판적 고찰에 대한 결론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탈 서구화가 EU의 규범적 외교정책에 대해 여러 근본적인 도전 과제로 맞서고 있으나 이 과정이 반드시 또 다른 이념적 대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 정책 입안자들이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국제정치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EU의 글로벌 아젠다는 EU가 지지하는 규범에 도전장을 던지는 새로운 힘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도 국제사회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009년은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유혈 무력 개입으로 인해 EU가 중국에 경제 제재와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2009년은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논쟁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 1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주권 문제로 다루어지는 사안이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인권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관찰자들은 중-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들의 관계가 이러한 모순을 조정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워 한다.

중국에 대한 다른 모든 제재는 철회된 가운데, 무기 수출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1978년 이후 중-EU 교역량은 60배 이상 성장했고, 2006년에는 약 2,540억 유로에 달했다. 1999년 이후 중국과 EU의 국가 수반은 연례 정상회담을 여는 한편, 보다 긴밀한 관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수의 전략적 대화와 분야별 대화를 보장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렇지만 2008년 12월 중국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후보 모임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날 계획을 발표하자 중-EU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중국에서는 주권 문제로 다루어지는 사안이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인권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관찰자들은 중-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들의 관계가 이러한 모순을 조정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워 한다.

이러한 전개 양상 외에도 중-EU 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EU의 역할에 관한 더 일반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EU와 중국의 관계가 EU의 윤리적, 규범적 외교정책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가치 기반의 외교정책이 권력 정치와 어떻게 타협할 수 있나? EU에서 공언하는 가치와 규범은 얼마나 보편적인가?
- 2) 중국이 주권,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접근법을 UN과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다르게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3) 중국이 타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국제적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상호 의존 시대에서 세계화의 탈 서구화라는 세계적 맥락을 고찰하면서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어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적

〈중-EU 교역 및 투자 규모〉

상품 무역

2007년 EU의 대중 상품 수출 : 716억 유로
2007년 EU의 중국 상품 수입 : 2,308억 유로

서비스 무역

2006년 EU의 대중 서비스 수출 : 124억 유로
2006년 EU의 중국 서비스 수입 : 112억 유로

외국인 직접 투자

2006년 EU의 중국 투자 : 60억 유로
2006년 중국의 EU 투자 : 21억 유로

가치 및 EU의 규범적 권력과 세계 속의 역할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EU 관계에서 관찰된 사안을 아프리카와의 관계에 적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국제관계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가치와 윤리, 책임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고자 한다.

냉전 종식 후 동반자 관계의 양상 정의: 협력, 대립 아니면 가치 충돌?

글로벌 의제는 더 이상 냉전으로 불리던 상황에서 나타났던 두 강대국의 기능에 관한 문제도 양극 체제의 갈등도 아니다. 현재 우리는 권력과 관계, 글로벌 비전과 이해의 전환기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미래 동반자 관계의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2001년 이후 테러리즘은 글로벌 의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초점은 이제 흐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부상하는 다극체제의 양상에는 경제, 기후 변화, 지속가능 개발, 인구 변화 등 구조적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 글로벌 이슈들에 대처하기에는 서구 세계가 주도하는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상호 의존적 동반자 관계와 기능적 전략을 수반한 다양한 행위자가 공유하는 글로벌 책임 및 공동 개발 해결책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념적 기반(예를 들어, 악에 대항해 미국식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내세우며(대 테러전을 수행하는) 민주주의 연맹(league of democracies)) 위에서 또 다른 적과 냉전 대립을 끊임 없이 계속할 것인지 또는 상호 존중, 분업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발전을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명백한 것은 향후 수십 년은 경쟁과 협력으로 점철되리라는 점이다.

상호 의존적 글로벌 이슈들에 대처하기에는 서구 세계가 주도하는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상호 의존적 동반자 관계와 기능적 전략을 수반한 다양한 행위자가 공유하는 글로벌 책임 및 공동 개발 해결책이 요구된다.

유럽은 아시아에서 세계 정세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경제 파트너로 자주 평가 받는 반면, 미국은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초강대국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국제관계를 정의하는 규범 설정의 맥락에서 미국은 전통적 역할을 저버리고 2차 세계 대전 후 글로벌 거버넌스를 확장했던 것과 달리 선택된 핵심 국가의 정권 교체와 주권 수호의 경계심에 치중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소프트 파워뿐만 아니라 하드 파워까지도 점점 취약해지며 쇠퇴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자유방임 정치로 인해 발생한 국제 금융 위기는 미국이 세계 정치 지배에 대한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 징조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새로 들어선 미 행정부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미 행정부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자유방임 정치로 인해 발생한 국제 금융 위기는 미국이 세계 정치 지배에 대한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 징조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새로 들어선 미 행정부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대신에 EU는 UN 강화를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촉진시켰다. ‘더 나은 세상의 유럽(Europe in a better world)’¹⁾이라고 명명된 EU의 안보 전략에서도 이러한 야망을 보여주고 있다. EU가 달성한 가장 핵심적 성과는 역내 지속적 평화와 번영 및 EU의 점진적인 확장이다(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08년 현재 EU는 추정 명목 GDP 125조 810억 유로를 창출한 5억 인구, 27개 국가로 확장되었다. EU는 세계 경제 총 생산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서구에서 탄생한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세계화의 탈 서구화 시대는 처음에는 아마도 1980년대 중국의 내륙 지방에서 소리없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중국이 국내 개혁 과정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싱가포르에서는 서구에서 정의하는 현대주의의 쇠락과 아시아의 부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유한 유교적 시각(아시아적 가치)이 주창 되었다. 오늘날 많은 분석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아시아의 세기를 필연적인 흐름으로, 서구, 특히 유럽은 피할 수 없는 쇠락에 직면한 것으로 바라본다.

글로벌 거버넌스 의제와 규범적 야망을 가진 유럽은 개발도상국 세계에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아시아의 신흥 부상 국가 사이에서 쫓겨 못하고 있다. 양자는 모두 국가 주권 강화에 뿌리를 둔 자국의 이해와 권력 정치라는 ‘현실주의’ 의제를 바탕으로 움직이며, 이는 EU가

선호하는 다자주의와 규범, 협상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유럽의 세계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다음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 ◆ EU 및 그 회원국이 항상 동일한 전략과 이해,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반적으로 회원국은 인권 대화와 같은 어려운 과제를 EU 집행위원회에 전가하고 자국에 이익이 되는 사안만을 다루려 한다).
- ◆ EU는 성공(확장), 역내 우선순위(발칸반도) 또는 실패(헌법조약 국민투표) 등에 에너지를 빼앗겨 EU 내부의 문제에 집중해 왔다.
- ◆ UN 내, 특히 인권 이사회의 EU 입장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했다.
- ◆ 일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립 되지 않을 수 있다(중-EU 대 일-EU 관계).
- ◆ EU가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미국은 불참하거나 EU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교토 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 UN 개혁, 세계 금융 규제 및 금융 위기 관리 등).
- ◆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국가들은 EU의 우선순위인 WTO 도하 개발 아젠다, UN 인권 이사회,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 체제 및 아프리카 전략 등에 점점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기 목록은 EU가 (주로 아시아) 신흥 국가들과 경쟁, 협력하여 세계화의 탈 서구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들의 규범을 따르게 될 다른 국가들의 시각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익숙해진 미래 규범적 권력 및 평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재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아시아의 세기를 논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과 문명의 충돌, 희망적인 사고와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과 인구 변화라는 현실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할 수도 있다. 향후 세계는 하나 또는 둘의 극이 아닌 다수의 국가와 지역의 다원화로 특징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계화의 탈 서구화는 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적 역동성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부상이 반드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서구와 비서구 간의 근본적인 분쟁을 시사하는 것일까? 이는 국제 관계의

향후 세계는
하나 또는 둘의 극이 아닌 다수의
국가와 지역의 다원화로
특징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계화의 탈 서구화는
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적 역동성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 양상을 결정짓는 것인 만큼 중대한 문제이다.

중국(러시아와 함께)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는 분쟁적 가설의 핵심 행위자로 꼽혀왔다. 1930년대(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부상과 유사해서 이러한 가설은 더욱 과장되었다.²⁾ 이 글에서는 중국 전통과, 중국과 세계, 특히 유럽과 개발도상국(아프리카)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 보려고 한다.

미국의 분석가들과 정치인들 대부분은 중국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을 핵심적인 서구식(보편적) 민주주의 가치, 인권 및 자유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해석해 왔다. 중국의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인권 없이도 점차 제대로 기능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구와 개발도상국에서 민주주의와(법치국가라는 개념에서의) 법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세 개념의 보편성, 그리고 그들이 형성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의문은 세계적 논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³⁾. 현재 거의 유명무실한 '워싱턴 합의'도 이러한 삼위일체의 한 부분에만 치중함으로써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유럽의 개념과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아시아적 시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민주주의 책임성, 핵심 국가 역량, 규제, 그리고 공공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소홀히 했다.

1. 유교와 아시아적 가치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대안적 설명?

이 글에서는 이렇듯 복잡한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기보다는 일부 반향만을 단순화하여 부각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이와 관련된 인권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서구 세계의 담론이며 일부 인류의 고유한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보편적 호소력을 갖추고 있다.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민주주의는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 끝에서 유교가 발전한 때와 거의 같은 시대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발전했다. 유교는 중국에서 기원전 221년 제국의 통일과 독재체제로 인해 1900년대 초까지(때로는 급진적인 변형과 해석을 거쳐) 특정 형태의 사회 국가의 조직을 대신하는 지배적인 정치 윤리로 남았다.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로마 제국과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했고,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과 미국의 발전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정치적 현실에 재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백인 문화의 우월성이라는 잘못된 신념으로

민주주의는 이들 국가의 식민지와 소수 민족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이와 관련된 인권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서구 세계의 담론이며 일부 인류의 고유한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보편적 호소력 (그리고 UN 체제를 통한 보편적 승인)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의 지지자들 가운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비유럽 대표자들도 찾아볼 수 있다(미국은 반식민주의를 지지했으나 국내 인종차별 문제를 겪고 있었다).⁴⁾

1890년대 말 (강유위 등) 신 유교 사상가들은 보편 구제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품기도 했으나 이러한 유교 사상의 마지막 열망은 1911년 중국에서 군주 정치 체제가 붕괴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근본적 현대화의 물결이 시작되면서 수그러들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의 전환기에 일어난 급진적인 반 유교 운동은 유교를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중국 문명 퇴보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를 현대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중국 전통 문화의 모든 부분을 거부하는 데 사용했다.

같은 시기 유교 사상은 유럽에서도 신뢰를 잃었고(노예 정신) 서구에서 자본주의의 성공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막스 베버)와 대비되어 중국과 아시아 경제의 쇠락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계몽 운동 시기에는 중국 문명이 달성한 높은 성과로 인해 유교는 유럽 철학자들 사이에서 열망의 대상이었다.

현실에서는 유교 사상이 실제로 사회 운영 개념이었던 적도 더욱이 경제 모델이었던 경우도 결코 없었다. 그보다도 유교 사상은 사회 엘리트의 시각이자 권력자 집단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사회 조직적 규범이었다. 현대에서도 유교주의의 이러한 형식은 유효하며, 따라서 당연히 (공자와 맹자가 국가 사회 개념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체계화한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민주주의 평등 원칙과는 강력한 대립 관계에 있다. 유교적 가치에 대한 찬미는 1980년대와 90년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 역설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정반대의 논리를 띠며 다시금 부상하게 된다. 유교 사상은 갑자기 집단주의, 가족, 노력, 검소함 및 계급에 대한 존경 등의 가치를 통해

현실에서는 유교 사상이 실제로 사회 운영 개념이었던 적도 더욱이 경제 모델이었던 경우도 결코 없었다. 그보다도 유교 사상은 사회 엘리트의 시각이자 권력자 집단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사회 조직적 규범이었다.

아시아의 경제적 우월성을 설명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는 싱가포르의 리관유를 비롯한 다수가 주장했듯이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명백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제적 성공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정치적 정체(停滯)의 격차를 보완하는 편리한 설명이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이러한 논의는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다.

동일한 “유교 사상”에 대한 이러한 역설적인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유교적 가치 대 서구 민주주의의 논쟁은 문화 또는 교리에 본질을 둔 특징이기보다는 아시아의 부상과 서구의 퇴보 및 정체성 대 현대성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자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은 일본의 현대화는 1900년대 초반 중국 현대화의 자멸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이나 대만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와 서구식 법치가 사실상 아시아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유교적’ 엘리트 계급을 반대하는 순수한 시민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인권 수준이 향상되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에 반대하는 것으로 유교 사상을 도구화했다. 그러나 이렇듯 세계화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으로는 (한국, 대만, 일본의 민주주의와 싱가포르의 권위주의 정권 등) 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 형태를 설명하지 못했다.

2. 규범 권력으로서의 EU?

21세기 초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20세기 일본의 현대화 과정이 그러했듯이) 그 과정을 더 이상 서구의 방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세계화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 글에서는 아시아와 중국의 세계관이 유럽과 다르지만 서구적 가치와 아시아적 가치가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 이유는 첫째, 아시아적 가치가 곧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공식을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둘째, 중국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100년에 걸친 현대화 과정에서 자국의 역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초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20세기 일본의 현대화 과정이 그러했듯이) 그 과정을 더 이상 서구의 방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세계화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쌍무적 상황에서는 미국이 자행하는 초개인주의,

과도한 선교 행위, 그리고 일방주의를 우려하는 아시아인들에게 유럽의 고유한 사회 모델과 온건한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이 호소력이 있는 만큼 유럽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식 규범을 장려하기는 어려운 시기다. EU는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 유럽 대륙에 걸쳐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1980년대 지중해의 구 파시스트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EU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4년과 2007년에는 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입했다).

EU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임을 믿는다.

이 두 가치는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중요한 보루이며 빈곤 퇴치 효과와 분쟁 방지 및 해소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참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유럽 기구(EIDHR)

EU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임을 믿는다. 이 두 개의 가치는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중요한 보루이며 빈곤 퇴치 효과와 분쟁 방지 및 해소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유럽 공동체는 2006년 EIDHR을 설립했다. EIDHR은 EU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기구이다.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려면 EU가 국제 아젠다를 통해 인권과 법치, 그리고 협의 민주주의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경제적 개선 노력에 집중하며 충분한 평화와 안보 속에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된다.

개발과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그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핵심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인데, 만약 EU와 동반국의 관계가 정부 채널로만 제한될 경우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IDHR은 인권, 정치적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 참여와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다음 다섯 개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 1)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인권 존중과 근본적 자유 강화
- 2)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개혁, 이해집단 간 평화적인 조정 및 정치 참여와 대표성 촉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 3) EU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대화, 인권 수호자, 사형제도, 고문, 어린이 및 무력 분쟁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인권 및 민주주의 노력에 대한 행동 지원
- 4) 인권, 정의, 법치와 민주주의 증진 등의 보호를 위한 국제 및 역내 구조적 틀 지원 및 강화
- 5) EU 선거 감시단⁶⁾을 통한 민주주의적 선거 절차 신임 및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그러나 EU가 이러한 방향으로 타 국가들을 이끌 수 있는 제도와 권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럽을 제외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의 성과는 크지 않다. EU는 (개발 원조 증대, EIDHR과 같은 특별 자금 지원 프로그램, 무역 조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비자 제한, 개발 원조 및 교역 규모 감축 등) 제재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체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들에는 효과적이지만(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토고,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리베리아, 짐바브웨에 모두 제재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EU의 압력을 견뎌낼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중국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1995년 이후 EU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여부와 관계 없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 감시를 타국과의 모든 공식 협의의 필수 요소(소위 인권 조항)로 포함시켰다.⁶⁾

회의론자들에게 중국-EU 간 인권 대화는 적절한 사례다.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중국의 국내 발전과 연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부정적이거나 형벌적인 접근을 표명하려는 의도로 필수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동 지원, 국제 인권 협약의 가맹, 비준 및 이행, 그리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관계 수립을 통한 위기 방지 등 대화와 긍정적인 조치를 증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 연안 국가와 체결한 코토누 협정⁷⁾ 제96조에 제재가 가해지기 전 대화 과정을 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이는 2007년 피지에서 발발한 쿠데타 이후 호주와 EU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인권 조항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 반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어떤 국가는 인권 관련 조건을 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EU 역량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국가는 그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권 조항으로 인해 EU 안팎으로 상당한 수준의 논쟁이 일어났다.⁸⁾ 그러나 인권 조항은 일방적 제재와는 달리 국제법에 부합하고 상호 합의되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호 동의 하에 증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어느 국가에서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외부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에 달려있다. 그래서 EU는 현재 국내 변환 과정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사용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EU는 아프리카 상호 감시 체계(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APRM)를 지지하는데⁹⁾, 이는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기구이다.

회의론자들에게 중국-EU 간 인권 대화는 적절한 사례다.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중국의 국내 발전과 연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2007년 중-EU 정상회담 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듯이 EU는 어느 정도 좌절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의 동반자 및 협력 협정에 대한 협상에도 필수 조항이 포함되며 이 조항에 대한 찬반 논의가 중국에서 진행 중이다.¹⁰⁾

인권 또는 민주주의와 같은 분야에서, 특히 개도국 및 신흥 국가와의 관계에 이중 잣대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대부분 유럽의회 출신 비판가들은 EU가 상업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의 압력에 너무 쉽게 굴복하며 인권 대화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 EU와 중국 간 구조적 인권 대화

1994년 EU는 정기적인 인권 대화 참여에 대한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중국으로서는 UN 인권 위원회의 엄중한 조치를 피하려는 수단이었다. 1995년 이후 몇 번의 예외가 있었으나 중-EU 인권 대화는 6개월에 한 번씩 중국과 유럽을 번갈아 가며 열렸다. 이 공식적 대화는 NGO 관계자, 학자 및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은 중-EU 인권 법률 세미나로 보강되었다.

중-EU 인권 대화는 유용한 소통의 채널이자 다수의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인권 전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또한 중국의 관료들이 국제 인권 표준과 EU의 관습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대화를 통해 위원회는 인권 협력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향후 프로젝트에 대해 양자 협력을 유도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인권 대화는 여전히 장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 도출은 느린 편이다. 많은 사안들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면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점진적이거나 경험적인 개선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대화의 영향력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과정에서 UN 인권 메커니즘의 중국 관여 확대 등 긍정적인 조치(예를 들어, UN 인권고등판무관실 및 UN 특별 보고관으로의 초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인 및 비준)가 탄생했다. EU 협력 기관은 2004년 인권 대화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했다. EU 각료이사회는 이러한 대화와 이와 관련한 법률세미나는 인권 문제에 중국을 관여 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유용한 도구이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유럽의 소프트 파워와 윤리적 딜레마

유럽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모색하며 압력을 행사할

수단이 없을 경우 상당 부분 친선에 의지한다. 따라서 공동의 이해, 세계 공공재(환경, 개발¹¹⁾) 증진 또는 기후 변화 및 HIV/AIDS와 같은 세계적 '악' 과 맞서 싸우는 분야에서는 EU의 성공도 그만큼 유리하다. 또한 유럽은 UN 체제를 지지하며 대부분의 국제 협약과 조약을 조인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EU의 입장에 대한 지지는 특히 인권¹²⁾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유럽은 규범적 이상주의와 실질적 이해, 즉 EU 자체의 이해와 회원국들의 이해¹³⁾ 사이의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인권 또는 민주주의와 같은 분야에서, 특히 개도국 및 신흥 국가와의 관계에 이중 잣대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대부분 유럽의회 출신 비판가들은 EU가 상업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의 압력에 너무 쉽게 굴복하며 인권 대화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은 세계에 대한 유럽 중심적 시각을 극복하고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스스로 부여한 위치에서 하는 '설교 행위' 를 중지해야 한다. 유럽은 세계의 선(善)을 위한 공동의 책임에 대한 자신의 몫을 부담하면서 동시에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 세계 어느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수년 간의 권력 이동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은 국제 관계에서 규범적 접근을 보다 더 상호 작용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방법과 복잡한 환경에서 모순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세계에 대한 유럽 중심적 시각을 극복하고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스스로 부여한 위치에서 하는 '설교 행위' 를 중지해야 한다. 유럽은 세계의 선(善)을 위한 공동의 책임에 대한 자신의 몫을 부담하면서 동시에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 세계 어느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은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세계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유럽의 타당성을 보다 더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실 유럽은 다양성의 통합체이므로 다양한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비교적 상위 수준의 공통 분모에 부합하는 공통의 해결책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는 만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력자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항시적인 조정 노력은 EU의 시각을 내부로 향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불가변성을 띠게 되며 수사적 베일로 가려진 하나의 해결책이 모든 접근법에 강요될 수 있다. 따라서 EU는 내부 조정 절차와 수사법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EU는 신뢰성 있는 타당한 행동을 취하고 외부 세계에 EU가 직면한 모순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EU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여러 우선순위(유해한 온실가스 배출,

환경, 공정 거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며, 규칙을 (강요하는 대신에) 협상하며, 말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발 재원과 같은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이행(예를 들어, 개발 금융) 하도록 해야 한다.

3. 유럽과 아프리카의 관계 및 중국과의 경쟁: 조건의 함정

아프리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EU와 중국의 전장터처럼 보인다. 중국이 과연 아프리카에서 EU가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새천년 개발 목표 및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민주주의, 인권 등 윤리적 외교 정책을 훼손하는가?

유럽 집행위원회가 개발과 아프리카 정책의 '유럽화' 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아프리카에서 대륙, 지역, 국가 차원의 소유권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 EU 원조 노력을 합리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출범시켰다. EU는 "조건" 으로부터 역행해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정치적, 재정적 인센티브(2007 아프리카-EU 전략적 동반 관계¹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냉전 시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의 독재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및 과도하게 규범적인 워싱턴 합의의 두 접근법과는 차별화 된 방법이다.

EU-아프리카 동반자 관계의 방향 전환 과정을 가속화한 요소로 중국이 작용했을 수 있다. 중국의 부대 조건 없는 비즈니스적 접근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포스트 냉전 개발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참여를 강화했기 때문에¹⁵ EU에게는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복잡한 사안이 되었다. EU는 아프리카와 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새로운 기반과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7년 리스본 정상회담은 예전의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벗어나 공동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적 동반 관계로의 전환 계기였다. 냉전 종식 후 거의 20년에 걸쳐 일어난 세계화, 상품무역 급증 및 글로벌 정치의 구조적 전환으로 아프리카, 중국과 유럽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각이 협력적일 것인지 대립을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중국 정부는
상업적 상호작용을 통해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회 문제에 간섭하게 되는
'부수적 피해' 를 과소평가했고
원조 조정, 소유권 및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정치적 발전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부족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정책을 주권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반을 둠으로써 EU와는 차별되는 국제 규범을 강조한다. 가치와 규범과 관련해서 팡종잉¹⁶⁾은 EU가 중국을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하기 보다는 중국도 EU의 규범과 정책을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성향이 안타깝다고 언급한다. 그는 이러한 가치 충돌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면서 서구에서 강요하는 규범이 아닌 세계가 소유하는 규범으로의 진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팡종잉은 중국의 국제 사회화 과정에서 EU의 역할을 선생님의 역할로까지 묘사하고 있다. 다른 중국 논평가들은 서구의 비판에 대한 거부가 훨씬 더 거세다.¹⁷⁾

중국의 외부 개발 정책은 자국의 개발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국제적 견해차와 아프리카 자체 내에서 쌓여가는 불만을 고려하여 자국의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의 경쟁은 거친 환경에서 다른 신흥 경제국 기업들 간에 발생한다. 중국 정부는 상업적 상호작용을 통해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회 문제에 간섭하게 되는 ‘부수적 피해’를 과소평가했고 원조 조정, 소유권 및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정치적 발전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부족했다.

중국의 근본적 문제는(상호 의존적인 주요 국내 정책과 부차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자국의 이해와 국제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제사회 참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주권이 취약한 국가나 쿠데타 또는 국가 마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몰락하는 국가에 대한 대외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권 문제와 불간섭 원칙은 중국의 딜레마로 떠오를 것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비조건 원칙의 함정 그러므로 중국의 국제사회 참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주권이 취약한 국가나 쿠데타 또는 국가 마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몰락하는 국가에 대한 대외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권 문제와 불간섭 원칙은 중국의 딜레마로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고수하는 것은 중국 국민의 안전(에티오피아, 통가, 솔로몬 제도, 잠비아, 나이지리아, 수단에서 일어난 살인과 납치), 투자 및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수준에서만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자국의 이해를 보호하고자 간섭을 하게 될 경우 신뢰의 함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준을 넘어서면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주권과 국제적 책임성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EU와 중국 간 원칙의 차이가 반드시 공동 이해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이해라는 공간이 종종 기능적 협력과 다자적 해결책 촉진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런 해결책들이 상호 의존적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적합하다.¹⁸⁾

따라서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긴장에 대한 조정을 상향식 접근법으로 모색하기 위해 EU, 아프리카, 중국 간 실용적 3자 대화 도입을 제안했다.¹⁹⁾

결론

이 글은 세계가 이념적 경쟁(권위주의 대 자유 민주주의)을 향하고 있다던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권위주의적 대응 모델을 촉진하고 있다는 식의 고정된 결론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자유주의적이며 다자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이 민주주의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중국과 개발 도상국에 대한 정책 및 세계화와 관련된 유럽 내부의 담론을 신중하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 EU가 맺는 동반자 관계는 분쟁적 다극체제 또는 협력적 다원주의의 궤도를 결정짓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이념' (그리고 중국 위협 이론)을 사용할지 또는 기능적 접근법을 사용할지의 문제는 서구와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똑같이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다음의 질문이 될 것이다. 세계화의 탈 서구화에 대해 중국은 어떤 댓가를 치러야 하는가? 중국과 함께 확립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은 무엇인가?

유럽의 자유주의적이며 다자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이 민주주의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중국과 개발 도상국에 대한 정책 및 세계화와 관련된 유럽 내부의 담론을 신중하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후주 |

*이 논문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럽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1) http://www.consilium.europa.eu/cms3_fo/showPage.ASP?id=266&lang=EN&mode=g

2) Azar Gat: The return of authoritarian Great Powers. Foreign Affairs vol 86 N° 4 2007 7/8 월. 59-69.

- 3) Mireille Delmas-Marty: La construction d'un Etat de Droit en Chine dans le contexte de la mondialisation. In: Mireille Delmas-Marty et Pierre-Etienne Will(eds) La Chine et la démocratie. Paris(Seuil) 2005 p 551-576.
- 4) Muehlhahn, Klaus: Zwischen Ablehnung und Akzeptanz - Menschenrechte und Geschichte im modernen China. In: China aktuell 1/2006 pp 7-40.
- 5) http://ec.europa.eu/external_relations/human_rights/intro/index.htm
- 6)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이 인권 침해 조약의 자동 파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르면 EU의 제재가 불법적인 것이 된다. 인권을 조약의 필수 요소로 포함함에 따라 조항의 불이행은 조약을 파기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준다.
- 7) <http://europa.eu/scadplus/leg/fr/lvb/r12101.htm>
- 8) Cf. UK House of Commons Research Paper 04/33: The Human Rights Clause in the EU's External Agreements <http://www.parliament.uk/commons/lib/research/rp2004/rp04-033.pdf>
- 9) <http://www.aprm-international.org/>
- 10) Zhang Hua: The problem of the human rights clause and the China-Europe partnership agreement. In: Xiandai Guoji Guanxi n°8 August 2008 pp. 40-47.
- 11) EU와 EU 회원 국가는 글로벌 공적 개발 원조(ODA)의 60% 가량을 제공하고 있다.
- 12) Gowan, Richard, Brannter, Franziska (2008) A Global Force for Human Rights? An Audit of European Power at the UN. ECFR 2008.
- 13) Lisbeth Aggestam: Introduction: Ethical Power Europe? International Affairs 84: 1 (2008) 1-11
- 14) <http://www.africa-eu-partnership.org/>
- 15) 아이러니 하게도 2000년 첫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같은 해 EU와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코토누 협정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연합이 출범했다.
- 16) Pang, Zhongying (2007) 'Some Approaches to boost China's pivotal role in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FES Briefing Paper, New Powers for Global Change?, p.24/25.
- 17) Li, Ruogu (2007) 'Zhengqu renshi fazhanzhong guojia de zhaiwu kezhiyu wenti' (Correct understanding of debt sustainability of developing countries), in: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4/2007, pp. 63-72
- 18) Wissenbach, Uwe (2007) The EU's effective multilateralism-but with whom? Functional multilateralism and the rise of China, Friedrich-Ebert-Stiftung, International Politikanalyse.
- 19) 유럽 집행위원회 (2008) The EU, Africa and China: Towards trilateral dialogue and cooperat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COM(2008)654 final, 17.10.2008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베르너 캠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9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